

광주시·전남도 '대선 공약' 발굴 급하다

# '지역발전 호기' 이대로 놓칠 것인가

## 시·도 '공동 공약' 합의 후 회동 한번 안해

## 지역 미래 직결 '그랜드 플랜' 서둘러야

한나라당이 오는 29일 광주에서 대선 경선 후보간 경제정책 비교와 지역공약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키로 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타 지자체보다 지역의 미래를 담을 비전과 대선 공약사업 발굴에 한발 뒤쳐져 있어 대선 정국을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뒤처진 광주시·전남도=12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호남표'를 의식해 지역개발 계획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공언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의 현안 사업에 추동력을 불어넣는 데 매우 좋은 기회라는 얘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공약을 공동으로 도출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으나 타 시·도의 발빠른 대처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시·도가 별도의 팀을 구성, 다음주에 첫 회동을 갖기로 한 상태다.

광주시는 우선 전남과 공동으로 '영산강 개발 계획'을 만들 계획이지만 구상 단계 정도에만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문화·철단·의료 도시를 목표로 40개의 대선 공약사업 후보로 일차 발굴했지만 공약사업으로의 연결과 광주 미래와 직결되는 그랜드 플랜 또는 비전 제시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 F1(포틀러 원) 국제자동차대회 개최, 섬관광개발 프로젝트,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

◇타 지자체 발빠른 대처=대구시는 최근 '국제지식산업도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대선 세부 공약을 정리했다. 지능형 자동차산업 육성과 건강산업·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주요 사업이다.

전북도는 최근 각 정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을 요구할 사업 81건을 발굴했다. 이 사업에는 국비 88조원을 포함해 모두 133조원이 필요하며 전북도는 최종 20개 사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북도의 주요 요구사업 가운데 ▲환경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립 수소·연료 전지연구원 설립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이 반영될 경우 인근 전남에서 추진중인 서남권 개발, J프로젝트 등 대규모 사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북도는 오는 2020년까지 총 4조원을 투입, 낙동강 연안 개발을 통해 지역 경

제 활성화를 꾀하는 '낙동강 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역현안을 대선 공약사업으로 요구키로 했다.

◇한나라당 공약에 뭘 담았나=한나라당은 이달 초 당내 상임위원로 각 분야의 대선공약 초안을 마련한 후 정책위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분야의 공약 초안은 지역 균형성장을 기조로 동북아 물류수송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초안에서 지역별로 10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광주와

대구·대전을 내륙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해 연구개발(R&D)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서남해안 개발·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이밖에도 한반도 대운하와 열차페리 등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공약도 들어있다. 남북한 통일 시대를 대비한 개발 계획과 일본·한국·중국·시베리아·유럽을 연결하는 물류수송 체계 구축 등도 제시됐다. /채희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뉴라이트청년연합회와 활빈단 회원들이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앞에서 정부의 기자실 통제합 방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 "홍보처 폐지법안 협의 하겠다"

### 우리당, '기자실 통제합' 유보도 촉구

정부의 기자실 통제합 조치에 맞서 한나라당이 국정홍보처 폐지론을 제기하고 열린우리당이 협의수용 입장을 표명하면서 홍보처 폐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신중론을 펴온 우리당이 기자실 통제합 조처의 보류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가 정부와 정치권간의 전면적 대립양상으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24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정홍보처 폐지법안과 관련,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제기해오면 얼마든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다음주 국회 문화관광위를 소집해

서라도 (기자실 통제합 조처) 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느냐 하는 부분들을 추구하고 따져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자실 통제합 조처에 대한 입법 대응 여부와 관련, "양해가 쌓였던 부분이 큰 문제이며 내가 보기에는 법적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당이나 정치인들이 제안하면 법적 사항이 될 지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제안해오면 무슨 이야기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신 홍보처를 폐지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국정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단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반대여론이 많은 만큼 다시 한번 속고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여유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제도의 시행을 정부가 보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이 기회에 진정으로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선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대안을 내놓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2005년 11월 국정홍보처 폐지법안이 이미 행자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면서 "진짜로 통과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초반판세 승부처...홍준표 의원도 합류 5자 대결

## 후보자간 토론 가능...140분 정책 공방 뜨거울 듯

### ■29일 한나라 대선주자 광주 토론회 어떻게

한나라당이 오는 29일 광주에서 개최하는 첫 번째 대선 주자 정책토론회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0일 경선 대장정의 초반 판세를 결정지을 최대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뭐가 좋아질까? 2007 한나라당 정책비전화'라는 긴 이름이 붙여진 광주(호남권)토론회는 '따뜻한 서민경제, 세계를 향한 무한 도전'을 주제로 2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상무지구 5·18기념 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초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원희룡 의원, 고진화 의원 등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

한 4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하는 것으로 짜여졌다. 하지만 오는 27일 경선 참여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 홍준표 의원이 뒤늦게 합류하면서 토론 시간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토론 형식도 예초 후보간 과열을 우려해 각 후보가 20분씩 자신의 경제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사회자의 질문에 만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대선주자측이 "제대로 된 검증은 위해 토론이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정책에 대해 후보간에 질의응답도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따라서 대선주자간 치열한 정책검증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각 후보는 '민생경제 살리기 방안'을 주제로 7분간씩 자신의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사회자의 개별 질문에 답한 뒤

10분씩 다른 후보의 정책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토론 개시에 앞서 '국민에게 듣는다' 코너에서는 인터넷이나 행사 현장에서 경제분야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벌써부터 당 홈페이지에는 '한반도 대운하 정책이 가능할까' '불안한 일자리 튼튼하게 할 방법' 등 네티즌들의 의견이 다수 올라와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대선주자들은 행사 당일이나 전날 광주에 내려와 민생현장을 방문하거나 경제인 간담회, 일일 서민 삶 체험 등을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 참석 인원은 광주 500명, 전남 300명, 전북 100명 등 1천여명으로 잡고 있다.

토론회와 관련 양대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측은 진행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우선 140분으로 예정된 토론회 시간 단축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 전 시장측은 '1천명 이상 모이는 공개 장소에서 토론회 2시간 이상 진행되면 예상치 못한 돌발사고가 생길 수 있다'면서 토론회시간을 90분 내지 100분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 전 대표측은 '방송사들이 140분의 시간을 할애한 것은 한나라당에 좋은 기회'라며 시간단축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청와대 "기자실 통제합 기본방향 불변"

### "브리핑제도 등 미시적 조정 가능성은 있어"

청와대는 24일 정부의 부처 기자실을 통제하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기본 방향은 변함 없이 간다"고 전제한 뒤 "다만 브리핑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견 중에 합리적인 것은 능동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앞으로 언론과 정부 모두 상당기간 불협이 따르겠지만 언론은 취재 방식과 스타일, 정부는 언론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변화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미시적 조정 가능

성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이지 기본 방향은 달라질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은 언론의 품질을 높여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며 "부처 출입기자실 제도 폐지는 언론사 안에 통합적 시각으로 접근하게 해 기획과 연구 중심의 보도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기자실 통제합안에 대한 언론계 등 각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실제보다 평정하 왜곡된 반응이지만 한편으로는 각오했던 일"이라며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분위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모아엘가

# 5월 31일 옥암지구 대표아파트 -모아엘가

모아엘가만의 특별함이 찾아옵니다!

**5월 31일 OPEN**

아름다운 요양병원  
원도심방향

모아엘가 모빌하우스

목포 기동병원  
동신 한방병원

신업은행

한빛초교

우성아파트

계약금 5%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

33평형/34A평형/34B 총 518세대

**문의 2838-111**

시행사 - (주)모아주택산업

시공사 - 모아건설산업(주)

엘가전속모델 구혜선 팬사인회 **6월 1일, 오후 1시**